

☾ 교수 사외이사 겸직 허용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장과 학장을 제외한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학생의 교육, 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에 따라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기업 숫자와 기업체로부터의 보상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 "실질적 근로내용 따라 퇴직금 지급해야"

교수임용시 객원강사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도 전임강사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이슈화하는 비정규 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조수현 부장판사)는 11월 6일 윤모씨 등 9명의 K대 의대교수들이 K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억 1천여 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당시 원고들은 객원강사로 위촉됐지만 실질적으로 전임강사의 업무를 수행했고 전임강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아온 것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다른 전임강사와 같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금 지급 여부는 원고들의 공식적인 지위에 따라 결정되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당시 전임강사로 임용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할 실질적인 처우 문제"라고 덧붙였다.

☾ 이공계 진학 여학생에 특혜

여성 과학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에게는 일정한 특혜가 주어진다. 또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는 물론 기업에까지 과학기술 분야 여성 채용목표 비율이 설정돼 일정 수준의 여성 과학기술인 채용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국회는 11월 8일 이같은 내용의 '여

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대학의 이공계 여학생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여성 과학기술인의 진출이 부진한 과학기술분야에 잠정적으로 이들에 대한 채용 목표 비율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여성 과학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은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 하며 여성 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도 건립된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1월 12일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 촉진 문제와 관련, "아직 마련된 기준은 없으며 앞으로 국회와 관련 기관 및 단체간 의견 조율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우선 이공계 여학생 비율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대학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1년 기준으로 대학, 기업,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여성 연구개발 인력은 총 연구개발 인력 17만 8천여 명 가운데 1만 9천여 명(11.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9년 현재 미국의 과학기술인력 가운데 여성 비율은 24.7%였다. 2002년 현재 4년제 이공계 대학(163개)내 여교수 수는 784명으로 이공계 전체교수의 5.8%에 그쳤다. 또 이공계 여학생의 비율은 박사과정이 13.4%, 석사과정 19.3%, 학사과정이 19.2%에 머물고 있다.

● 교육대학원 5개 설치 인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3년에 교육대학원 5개가 신설되고 모집정원도 490명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14일 2003년에 교육대학원 5곳을 신설해 교육대학원 수가 모두 135개로 늘어나고 모집정원도 2002년보다 490명 많은 2만 56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교육대학원은 광신대, 동해대, 한국성서대, 그리스도신학대, 중앙대(국악교육) 등 5개 대학의 12개 전공이며, 모집인원은 114명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존의 26개 교육대학원에 전공별 증원과 전공 증설을 통해 390명의 증원을 허용했으나 2002년 신설된 교육대학원 중 인가 뒤 개설되지 않은 전공은 폐지시키고 학생 모집이 미달된 2개 교육대학원은 14명 감축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중등교원이 과다하게 양성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교육대학원의 신설과 증설을 최대한 억제했다"며 "신설 또는 증설된 교육대학원도 현직 교사만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 학교교육 향상 등 인적자원 정책 제시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11월 14일 학교의 자율권과 책임 강화, 대학 자치를 위한 국립대학 운영시스템 구축 등 인적자원 개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회는 이날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대학 자율기반 구축,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체제 정립 등 4가지 정책 방안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자율성·책무성 제고, 직업교육 내실화, 교원 전문성·사기 고양, 교육행정체제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학교의 자율권 강화를 위해 국립대 부설 고교의 운영 자율권 부여, 자립형 사학 확대, 공립학교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협약학교제 실험적 도입 등을 건의했다. 특히 국립대학의 자율기반 확충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총·학장을 '총·학장 초빙위

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또 국립대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예산 중 일정비율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가칭) 도입을 검토할 것과 '국립대학설치운영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업 내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일과 학습을 연계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범위를 늘리고 우수 e-Learning 과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 학습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갖추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역 인적자원개발의 총괄, 조정 기능을 부여하고 최소한 '과' 수준 이상의 인적자원 개발 총괄부서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 이공계 기피현상 타개 위한 워크숍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산·학·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21~22일 양일간 대덕롯데호텔에서 "이공계 기피현상 타개책"이란 주제로 '산학협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숍에서는 고재방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보와 이종환 케이맥(주) 대표, 한민 구 서울대 공대학장, 정광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두희 동아시아언스 대표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있었으며 이공계 기피현상 타개를 위한 정책 건의사항을 협의하였다. 최종 관계자는 "이공계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학교원 모집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도 대학교 교수 모집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한 14개 국립대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응시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토록 권고했다. 11월 22일 국가인권위는 관련자료 및 법령을 검토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교수 응시연령 제한'이 헌법 제 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립대들은 교원모집에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로 △연구능력 향상 및 양질의 교육제공 △교수진의 연령을 적정하게 분포시켜 학사운영 및 업무의 연속성 추구

△신규 교원간 균형과 조화 도모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 11조의 준용 △대학의 자율적 선택사항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측은 교육자의 연구능력은 나이가 아니라 연구실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연령이 적은 사람이 향후 더 나은 업적을 낼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가인권위 측은 지원자의 연구능력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정한 연령을 배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대학의 행정편의만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 이공계 신입생 3,500여명 등록금 지원

2003년부터 이공계 대학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으로 매년 215억 원이 이공계 대학, 대학원 신입생 3,500여 명 등에게 지급되고, 또 이공계 신입생, 재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로 93억 원이 지원된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고교 내신 상위 20%(수학, 과학 평균석차 기준)와 수능 수리, 과학 탐구 영역 모두 1등급(수도권), 2등급(비수도권)인 이공계 신입생이며 의, 치의, 한의, 수의학, 약학 분야 등의 신입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28일 우수한 자연계 학생들의 자

연과학 및 공과 대학 유치를 위한 '청소년 이공계 진출 촉진 방안'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2003년 이공계 대학 신입생 장학금은 194억 원으로 3,500여 명(등록금 550만원 기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수이며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는 2003년 2학기부터 21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내신성적 기준을 충족하고 수능 수리, 과학 성적이 1등급인 학생 중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과 국제올림피아드 3위권에 입상한 신입생은 우선 선발된다. 지급 규모는 연간 수업료와 기성회비 전액이 원칙이며, 수혜자가 기준성적을 유지하고 타계열로 이동하거나 제적 또는 허위·부정신청 등으로 자격을 잃는 경우가 아니면 졸업시까지(8학기 내) 계속 지급된다. 장학금은 우수학생이 몰리는 수도권, 특정 대학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97억 원씩 균등 배분되며 시도별로 최소 2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 학교의 수혜액 상한선은 20억 원으로 정해졌다. 지원 대상은 대학(산업대, 전문대, 교대, 교원대 포함)의 자연과학·공학 계열이며 사범대와 교원대, 농대 자연계열, 교대·교원대 수학·과학 교육전공도 해

당된다. 다만 의·치·한의·수의학과 약학, 간호, 보건, 가정학 및 관련 분야 전공은 제외된다.

☾ 교원·교육대에 교사교육 센터 건립

교원대와 교육대에 교사교육센터가 건립돼 정보통신기술(ICT)의 수업 활용 교육이 강화되고 현장 교육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실습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월 27일 천안대에서 열린 교원대 및 교육대 총장회의에서 2003년에 100억 원 등 향후 5년간 1,158억 원을 투자해 교사교육센터를 건립, 현장적합성이 높은 교사양성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사교육센터는 ICT 활용 교육시설과 함께 수업행동 분석실, 교과별 특별교실 등을 갖춰 교사들의 컴퓨터 수업 활용능력을 높이고 초등교사 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학교현장에 필요한 교수·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실습제도를 개선하고 수업실기평가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또 현재 8~9주인 교육실습기간도 15주 정도로 늘리고 1~2주는 도서·벽지 및 농어촌에서 실습하는 '지방실습제'가 도입되며 수업실기평가 인증기관으로 지정

된 우수교육실습학교에서 수업실기능력을 평가해 교사임용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지방대 육성자금 40개 대에 7~20억 원 차등 지원

2002년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대상 4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대학 육성 재정지원 사업은 지방소재 120여 개 4년제 국·사립대를 대상으로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02년 처음으로 40개 대학에 5백억 원의 재정이 지원되었다. 선정대학별 사업규모별로 7~20억 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으로 선정대학들은 특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업 목표의 타당성 및 대학 개혁 방향과의 일치성,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에 기여 정도,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 정도, 지방대학의 학생 유인 효과 기여도 등 모두 6개 항목에 걸쳐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건양대와 동양대, 나사렛대, 포항공대, 인제대, 경주대, 청운대 등은 2002년 '교육개혁 우수대학'에 이어 이번 지방대학 육성 재정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됐다. 또 건양대, 대구가톨릭

대, 동의대, 원광대, 호남대 등은 지난 4월 산업자원부 신규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지정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요대학별 프로젝트를 보면 재학생들 취업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동의대의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특화사업', 중국 우수대학과 교류를 확대해 체계적인 한중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불대의 '중국관련 특성화 분야', 나사렛대의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고등교육 실현을 위한 점자·음성·전자 교육정보센터 설치사업' 등이 눈에 띄는 프로그램이다.

☾ 대학 학술·연구정보 통합 관리

이르면 2003년부터 대학별로 분산돼 있던 학술·연구 정보가 통합 관리되며, 3개 대학 이상이 공동 운영하는 양질의 온라인 교육 강좌도 매년 10개 이상씩 확대돼 교수나 학생들의 연구, 강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또 대학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행정정보 업무가 단계별로 통합돼 수강신청이나 민원절차가 간편해지며, 모든 대학에 정보화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책임관(CIO)이 생겨 교육정보화와 관련된 학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김두연 정보지원담당

관은 'e-Campus 지식공동체 구현을 위한 대학 정보화 활성화 종합 방안' 주제 발표에서 △e-learning 기반 확충 △학술 연구 정보 공동 활용 확산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ERP)구축 △대학정보화 추진체제 강화 △건설한 사이버문화 조성 등 5가지 영역을 향후 5년간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정보화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종합 방안에 따르면 먼저 학술 연구정보 활용을 위해 2003년에는 우선 분산돼 있는 국내 학술연구정보와 민간 구축 DB를 연계한 지원 서비스가 실시되며, 2004년에는 학술 정보유통 표준화 및 서비스 체제가 확립돼 2007년까지는 권역별 공동 활용체제가 가능하게 된다. 원하는 교육을 실시간으로 받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이용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2003년부터 전체 강의실의 10%가 e-강의실 형태로 운영되며, 2005년까지는 70%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3개 대학 이상이 공동 참여하는 온라인 강좌도 매년 10~50개 정도 확대되며, 2007년에는 전국 대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형 강의실이나 디지털 편집시스템 등도 도입된다는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양질의 온라인 강좌가 수강생 부족으로 투자 효과를 거

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학간 협력을 통해 과목을 공동 개설토록 하는 한편 대학간 학점 인정도 가능하도록 해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학간 정보해소 격차 해소와 예산 절감을 위해 현재 대학별로 개별 운영하고 있는 정보 및 행정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겠다는 것이 발표된 교육 정보화의 큰 물줄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우선 2003년에 1개 대학을 선정해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ERP) 등을 시범 도입하고, 2007년까지 전 대학에 확산한다는 방침. 대학별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연계 통합, 궁극적으로는 대학민원단일창구(one-stop, non-stop)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는 것. 이밖에도 CIO로 통칭되는 대학정보화책임관이 2003년부터 대학에 고정 배치돼 교육 정보화를 총괄 조정 관리하는 한편 위상도 교무회의 참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책임관 확보, 온라인 강좌 학점 인정 등 개선에 필요한 제도는 대학들이 학칙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재정 지원을 통해 내실을 거두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여대생 취업지원센터 5개대에 설치

여대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 및 경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대생 커리어개발 지원센터(가칭)'가 2003년에 전국 5개 대학에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월 1일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여성부와 함께 전국에서 남녀공학 대학을 중심으로 5곳을 선정해 '여학생 커리어개발 지원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센터에 여성발전기금 4억 원을 지원해 여성 취업 및 경력개발 관련 전문가(박사인력)를 여학생 전담자로 채용토록 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안과 표준모형 설계 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취업 알선에서 기업 체택, 기업연수, 인턴십, 온라인 직업상담 등 종합적인 여성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학생의 직업 및 진로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며 진로 관련 요구 사항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지원센터 설치에 여성인력 개발이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대생 취업률이 남학생에 비해 낮고 각 대학의 여대생에 대한 취업 지원이 남학생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

제 지난 4월 한국여성개발원은 전국 82개 대학의 취업정보실과 취업 프로그램 등을 조사한 결과 여대생의 진로 및 취업지도 교과목을 개설한 곳은 8개 대학(11개 강좌)뿐이었고 남녀공학대학의 경우 여대생 취업지도를 하는 곳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 이공계 장학금 매년 100억원 조성

2003년부터 매년 이공계 고교생 1,000명과 국내 주력산업 관련 학과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1,500명 등 2,500명에게 총 100억 원 가량의 '산업발전 장학금'이 주어진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과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9개 업종의 사업자 단체장들은 12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기술센터 개소식에서 '산업발전 장학금 조성'에 관한 민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산업발전장학금은 고교생은 연간 1인당 100만 원,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1인당 각각 500만 원과 700만 원 가량을 받는다. 연간 고교생 장학금 10억 원은 정부 예산으로 마련된다. 또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장학금 90억 원은 정부예산 50억 원, 업종별단체 출연액 40억 원으로 조달된다. 1기 장학생은 2003년 1월 공고로

거친 뒤 2003년 상반기에 뽑아 하반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한다. 고교생의 경우 특허청과 산업기술재단이 경시대회 등을 통해 장학생을 뽑을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대학 수시입학 자격을 주도록 각 대학에 요청할 계획이다. 대학 및 대학원 장학생은 관련산업 주제에 대한 논문이나 실험과제 공모 또는 성적, 이공계 대학장의 추천 등을 통해 매년 대학생 1,000명, 대학원생 500명을 선정한다. 분야는 자동차, 기계, 반도체, 전자, 철강, 섬유, 조선, 화학, 전력(원자력 포함) 등 9개 업종이다. 특히 대학 및 대학원 장학생 중 우수 학생 20명 가량은 해외 유명 대학이나 산업 기술관련 연구소 등에서 1년 이하 연수비용의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자부 산업기술인력기획단장은 "핵심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주력 산업이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인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업발전 장학금을 산업계와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전국 대학에 정보보호 비용 지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3차년도 대학동아리 정보보호활동 지원 사업으로 전국 45개 대학동아리

에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12월 5일 밝혔다. KISA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대학동아리들로부터 지원 접수를 받아 선정한 이들 동아리에는 노트북·PC 등 장비와 지원금을 포함해 750만 원씩이 제공되며, 별도로 정보보호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 경우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45개 대학동아리는 별도로 방학기간을 활용해 산업체 현장견학과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인건 초·중·고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점검 등 정보보호 봉사활동도 펼치게 된다. 이번 3차년도 대학동아리 정보보호활동 지원사업은 2003년 9월까지 실시된다.

☞ 『미래의 직업세계 2003』 발간

교육인적자원부는 12월 17일 미래의 산업, 직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이에 따른 유망직업, 대학 학과별 인력배출 전망 등을 안내하는 종합 진로, 직업정보서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을 발간, 배포했다.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은 정부가 발간한 첫 종합 진로, 직업정보서로 직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제 1권 직업편과 대학의 학과별 정보가 수록된 제 2권 학과편으로 구성돼 있다. 1권 직업편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 상의 소분류 69개와 세

분류 121개 등 모두 190개의 직업군을 선정, 직업군별로 성별, 학력별 취업 현황과 각 직업별 월 평균임금, 필요한 교육, 자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권 학과편은 전문대 45개와 4년제 대학 56개, 대학원 18개 등 115개 전공분야를 선택해 각 전공별 교육목표와 교육 내용,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 임금수준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미래의 직업세계 2003'은 자신의 적성과 직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직업선택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대학생들의 향후 진로 결정과 중·고교 학생들의 대학 전공선택에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매년 대학 재학생 희망직업 조사와 대학 졸업생 경제활동 추적조사를 해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직업세계'를 격년으로 발간하고 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CD로 보급하고 인터넷 이용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 대학생 31만 명에 학자금 용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31만 명에게 7,760억 원을 용자하고 이자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2003년

도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 계획'을 1월 2일 발표했다. 이같은 지원규모는 2002년(6,580억 원)보다 17.9% 늘어난 것이며 혜택을 받는 학생 수도 2002년(27만 8천 명)보다 3만 2천 명(11.5%) 증가한 것이다. 용자대상은 대학과 대학원,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 학생이며 각 대학 담당부서에서 학교장의 용자추천서를 받아 신청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을 때는 신용보증보협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1인당 용자액은 매학기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단기용자는 용자 후 2년간 균등 분할상환, 장기용자는 재학기간 거치(졸업) 후 7년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용자금이 유흥업은 연 9.5% 고정금리이며, 정부는 742억 원을 들여 이중 4.25%를 지원할 계획이며 학생은 5.25%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 신규사업 선정 매년 1백 70억 원 지원

2002년 종료됐던 BK21 핵심사업 후속의 신규 사업단이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70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월 7일 이런 내용의 'BK21

2003 신규사업 공고'를 하고 전국 대학으로부터 2월 5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3월부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지원액은 과학기술 분야가 150억 원, 인문사회분야가 20억 원이며 사업팀별 연간 지원액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가 7천만 원, 이학·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4천만 원, 공학·의학 분야는 2억 원 내외다. 지원은 석·박사 학위과정이 개설돼 대학원생이 재적중인 대학원 학과를 기준으로 팀을 구성, 신청할 수 있으며 교수 수를 기준으로 1개 학과당 최대 3개 사업팀까지 새로 지원할 수 있다. 교수 수가 10명 미만인 학과는 1개 사업팀, 10~20명 2개, 20명 이상은 3개 사업팀까지 신청할 수 있고 2002년에 완료된 기존 핵심사업팀 중 학문분야별 상위 30% 안에 든 우수 사업팀이 새로 지원하면 총점의 5%가 가산점으로 주어진다. 평가사항은 사업구성원 연구업적 및 과제 수행능력, 산학협동 계획, 교육과정 개선 및 국제협력 계획의 적절성, 학문발전 및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 등이고 신청은 학술진흥재단 BK21 사업지원부로 하면 된다. 세부 사업계획과 신청서식은 인터넷 홈페이지(www.bk21.or.kr) 참조.

☉ '약대 6년제' 본격 추진

한 의사들의 '반대'와 약대생들의 '조속 추진 요구'에 치여 표류했던 '약대 6년제 안'이 2003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 '약대 6년제' 추진을 약속함으로써 보건당국이 미온적 태도에서 '적극 추진'으로 입장을 선화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또 '약대

6년제'가 되면 약대생들이 한약 관련 과목도 이수한 뒤 한약사 시험에 응시해 한약 분야도 빼앗아갈 것'이라는 한 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위해 이것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일단 약대 6년제를 2002년 10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

회'(약발특위)가 결정한 내용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모든 약대를 현행 4년제에서 6년제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교과과정 개편 방향과 인력 수급 계획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